

영국, 한국 및 인류의 생명 유지 시스템

Ann Pettifor (영국 거시경제정책연구소(PRIME) 소장)*

■ 머리말

2014년 이후로 세계는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7년을 보내고 있다.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빈부를 떠나 모든 국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산불, 폭염, 가뭄 및 대규모 홍수는 이러한 고온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를 비롯한 일군의 청소년들은 생물다양성 감소로 더욱 악화되는 지구 가열이 극단적인 기후현상과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이러한 급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 상황의 급박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2020년 6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서 생태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6번째 대멸종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문명의 지속에 가장 심각한 환경적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¹⁾ 그리고 “조사 결과, 인류의 필수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대규모 조치를 긴급하게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라고 글을 맺었다.

* www.primeeconomics.org, 트위터 @AnnPettifor

1) Ceballos, G., P. R. Ehrlich, and P. H. Raven(2020), “Vertebrates on the Brink as Indicators of Biological Annihilation and the Sixth Mass Extinc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24), p.13596.

야생 서식지에 대한 인류의 침범과 유용의 결과인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화의 경제적 역기능, 불평등 및 취약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사스(SARS)의 급속한 확산은 신속하게 질병을 발견하지 않으면 세계화,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해 그 전염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최초로 밝혀준 사건이었는데, 2014년에 옥스퍼드대학 이안 골딘(Ian Goldin)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의 강화는 질병의 최초 발생과 확산 모두에 기여하기 때문”이다.²⁾

영국과 한국 모두 수십 년간 전례 없는 기술변화와 경제성장을 겪은 후 환경 및 보건 난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은 생활수준을 높이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하지만 경제 확장은 광업(신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채광 포함), 농업 및 주거 등 생물권(biosphere)을 해치는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무역, 채무 및 자본 흐름에 있어 전 지구적인 불균형과 국내 및 국가 간에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1750년에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940만 톤이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및 통계 전문기관 Statista에 따르면,³⁾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단 10년 만에 1억 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후로도 “산업활동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대영제국이 전성기에 이르고 1차 산업혁명이 마무리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억 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⁴⁾ 한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곱 번째로 많은

2) Goldin, I. and M. Mariathasan(2014), *The Butterfly Defect: How Globalisation Creates Systemic Risks,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45.

3) Tiseo, I.(2021), “Cumulative Carbon Dioxide Emissions Produced in the United Kingdom in Selected Years from 1750 to 2019(in Million Metric Tons)”, <https://www.statista.com/> (검색일: 2021.7.18).

4) IEA(2019),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eb3b2e8d-28e0-47fd-a8ba-160f7ed42bc3/CO2_Emissions_from_Fuel_Combustion_2019_Highlights.pdf (검색일: 2021.7.17).

국가이다. 로이터에 의하면,⁵⁾ 석탄화력발전은 한국 전력공급의 근간으로 국가 전체 전력 믹스의 약 40%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 미만이다. 2019년 6월에 채택되어 204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한국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7년에 3%를 차지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

극단적 기후의 위협과 과학자들의 경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운 계획은, 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너무 미흡하고 너무 늦었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은 부적절하게도, 그린뉴딜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달고 있다(아래 내용 참조). 한국의 그린뉴딜은 2022년까지 2년간 12조 9천억 원을 투자해 13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700만 명 이상의 전체 취업자 중 상당수가 화석연료 집약적 산업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영국의 매우 미흡한 기후붕괴 대응 방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민간시장에 역할을 일임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시장이 국가와 협력하여 한국사회와 생태계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변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자본주의와 “시장”이 영국과 한국 국민의 생존, 문화, 문명 및 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바람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영국의 녹색산업혁명

영국 정부가 기후붕괴에 대비하는 방식에는 그레타 툰베리가 언급한 “백년지대계(cathedral thinking)”⁷⁾가 거의 없다. 오히려 영국은 유예와 지연을 택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신의 기후 대응책을 “녹색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계획(Ten Point Plan for a Green

5) Chung, J.(2019), “South Korea Fires Up on Renewables, to Close More Coal Plants”, *Reuters*, June 18,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2021.7.19).

6) Lee J. H. and J. Woo(2020), “Green New Deal Policy of South Korea: Policy Innovation for a Sustainability Transition”, *Sustainability*, 12(23), p.2.

7) 편집자 주: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죽기 전에 성당이 완공되는 모습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전망 속에서 대성당을 짓기 시작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Industrial Revolution)”)으로 정의한다. 이 계획은 존슨 정부의 전국적인 경제발전 공약의 일환으로서, “2030년까지 영국에 25만 개의 고속런 녹색 일자리를 창출·지원하며 민간부문 투자를 3배 이상으로 장려하기 위해” 120억 파운드의 정부 투자가 동원된다.⁸⁾

녹색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정부의 실제 의도, 즉 화석연료에 의한 산업활동,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 BAU)⁹⁾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2030~50년의 어느 시점으로 변화를 유예하려는 의도를 무심코 드러낸다. 이는 10대 중점계획의 발표가 2020년 8월, 투자액이 두 배 이상에 달하는(270억 파운드) 도로사업 발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녹색혁명”이기는커녕, 차량 소유와 도로 건설이 상보적으로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뿐이다. 더 나아가, 영국 정부는 2.5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될 석유회사 BP의 클레어 릿지(Clair Ridge) 석유 굴착 플랫폼 건설과 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글렌곰(Glengorm) 가스전 착공도 환영하고 있다.¹⁰⁾ 영국 정부는 히드로 공항 확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비행편수 및 화석연료 소비의 증가를 촉진하여 탄소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다.¹¹⁾

■ 너무 늦은 미흡한 대책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 초 미국 서부와 캐나대를 뜨겁게 달군 열돔 현상과 2021년 여름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휩쓴 홍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극단적인 기후현상과 생물다양성 붕괴를 보면, 2030년, 2040년 또는 2050년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은 또 다른 형태의 유예, 즉 늦추

8) HM Government(2020),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gov.uk/> (검색일 : 2021.7.19).

9) 편집자 주 : business as usual(BAU)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사용될 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의미로 쓰인다.

10) Bradsock, F.(2021), “UK Ramps Up North Sea Oil Production”, *Oilprice.com*, May 29, <https://oilprice.com/> (검색일 : 2021.7.19).

11) Herrbin, R.(2020), “Heathrow Wins Court Battle to Build Third Runway”, *BBC*, December 16,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1.7.19).

고 이루는 행동에 불과하다.

최근의 기후현상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배출량 감소를 이루는 것은 향후 10~20년 동안 자동차와 비행기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이 계속 발생하도록 고착화할 뿐이다. 또한 이미 대기에 방출되어 지구를 덮은 거대한 열 담요 역할을 하는 유해 배출가스의 양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맨체스터대학교 틴들센터(Tyndall Centre)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교수가 논의한 바와 같이,¹²⁾ 기후붕괴 대응의 지연은 저탄소 대안을 개인차량으로 국한시킬 위험이 있다. 파리협정의 의무사항을 완수하려면 “영국은 2035년경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야”하는데, 여기서 “제로”는 넷제로(net-zero)가 아니라 실질 제로를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즉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앤더슨 교수에 의하면, 이와 같이 경제 전반에 걸친 의제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수학적, 정치적으로도 성공하려면 공정성을 핵심에 두어야 한다.

대응 지연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각국 정부는 배출흡수기술(Negative Emission Technologies : NETs)¹³⁾이라는 매우 투기적인 미래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소규모 테스트 단계로만 존재한다. 앤더슨 교수는 배출흡수기술이 “교수와 기업가들의 상상과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은 “(우리가 배출한)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대기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치명적인 기후붕괴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영국과 한국 정부가 지구에 곧 운석이 충돌해 대규모 파괴가 있으리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듣는다면, 자국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지출이 소요되는 장기적 계획을 안일하고 나태하게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적 요구와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도자라면 인류문명의 안전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인적·재정적·환경적 자원을 동원할 것

12) Anderson, K.(2019), “Brief Response to the UK Government’s “Net-zero” Proposal”, <https://kevinanderson.info/> (검색일 : 2021.7.18).

13) 편집자 주 : 파리기후협정 이후 각국에서 넷제로 배출을 위한 배출흡수(negative emission) 정책을 강조했는데,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지 『카본브리프(Carbon Brief)』는 10가지의 유망한 배출흡수기술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카본브리프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arbonbrief.org/explainer-10-ways-negative-emissions-could-slow-climate-change>

이다.

■ 소극적인 민간부문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에 의하면,¹⁴⁾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경제를 변화시키고 화석 연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존을 끊어내어 탄소 집약적 부문에 대한 시스템적 대안을 수립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가령, 한국이 경제 변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고용유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총당하고 이해당사자의 손실을 보상하며 대안적인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대도, 민간부문은 이에 필요한 규모의 재정을 동원하고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선진국의 정부만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송, 에너지, 건조환경¹⁵⁾, 농업 및 식품 생산 시스템을 가져올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력, 권한 및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은행과 함께 국채를 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재정”을 위하여 투자의 일부를 세입으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탄소세를 포함한 세금 조정의 부담은 전체 국민에게 부과된다. 대다수 국민은 대규모 탄소 배출에 책임이 없으며 교통, 에너지 등 대안적인 녹색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국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세금 부담은 불공평하다. 2018~21년 프랑스에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노란조끼 운동이 보여주었듯, 탄소세는 정부에 대한 적대심을 높일 뿐이다.

이에 대해 앤더슨 교수가 제안한 해결책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50%에 책임이 있는 상위 10%의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위 10%의 인구는 세계화의 특징 중 하나인 자본이동성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정부의 과세를 우회하여 조세피난처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누적되는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며 경제 변화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14) Mazzucato, M.(2018), *The Entrepreneurial State*, Penguin, p.5.

15) 편집자 주: 인간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구조 전체를 의미하며, 공장, 사무실, 철도 등 생산을 위한 건조 환경과 주택, 공원 등 소비를 위한 건조환경으로 나뉜다.

정부가 난관을 극복하고 정치적 의지와 추진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세계화라는 높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과 한국은 모두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통합의 유감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 자율성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점이다. 환율, 자본이동, 투자율, 금리 등과 관련된 주요 결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동시에 책임 주체를 알 수 없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의해 원격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세계화된 금융시장이 급진적인 그린뉴딜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자금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연 세계화 시스템은 각국이 운석 충돌에 버금가는 재앙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 질문에 누군가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금융화 및 민영화된 세계화 시스템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한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존경받던 앨런 그린스판(Alan Greenspan)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국가가 더 이상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과 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단행할 역량이 있는 민주적이고 선출된 대표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그는 “세계화로 인해 정책 결정은 ... 대부분 세계시장의 힘이 대체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제외한다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의 마찬가지다. 세계는 시장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¹⁶⁾

지구시스템의 붕괴 위험을 우려하는 환경론자, 노조원 및 활동가들은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이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지역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관계없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금융시스템은 자금을 조성(또는 억제)하는 경제·사회·정치 시스템에 필수적이며, 이 자금은 생산과 소비를 가속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할 수도 있고,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에 투자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한 정도의 채권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률은 지구(생태계)와 노동이라는 유한한 자산을 무자비하게 착취해야만 지불할 수 있다.

16) Tooze, A.(2018), “Beyond the Crash”, *The Guardian*, July 29,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2021.4.15)에서 재인용.

■ 부의 수익률과 노동의 수익률

세계화 시스템에서 채권수익률(이자)은 부유한 이들, 즉 채권을 창출하는 자(은행가, 자본가) 혹은 이자수익이나 임대료가 발생하는 자산(부동산, 지적재산, 채권, 주식 및 증권, 예술 작품)을 소유한 자의 수익률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금리생활자로 정의된다. 기존 자산에서 오는 부(富)의 수익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으며, 일당, 주급, 월급 등 노동의 수익률은 이에 비해 실망스러운 정도로 낮다.

세계화는 브레트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가 부(자산)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금률은 대부분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정의한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¹⁷⁾로 변화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봉쇄기간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의 총재산은 12개월 만에 5조 달러가 증가한 13조 달러가 되었으며, 이는 매년 포브스가 발표하는 억만장자 명단이 기록한 증가율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¹⁸⁾ 이에 반해, IL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은 하락하였다.¹⁹⁾ 수억 명의 노동자가 생활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영국과 한국의 노동자 모두가 교섭력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이 그의 저서 『불로소득 자본주의(The Corruption of Capitalism)』에서 역설하고 있듯이,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플랫폼은 “지대추구 기업으로서 기술장치는 통제하지만 과거의 거대 기업과 달리 생산수단은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노동) 거래에서 20%(또는 그 이상)를 가져가므로, 노동 중개자라고 하는 게 맞다.”²⁰⁾ 이는 영국과 한국의 노동조합이 자국의 경제가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맞서야만 하는

17) Christophers, B.(2020), *Rentier Capitalism: Who Owns the Economy, and Who Pays for It?*, London: Verso.

18) Pettifor, A.(2021), “Quantitative Easing: How the World Got Hooked on Magicked-up Money”, *Prospect Magazine*, July 16, <https://www.prospectmagazine.co.uk> (검색일: 2021.7.17).

19) ILO(2020), “COVID-19 Drives Wages Down, New ILO Report Finds”, <https://www.ilo.org/> (검색일: 2021.7.17).

20) Standing, G.(2017),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London: Biteback Publishing, p.213. (한국어판: 김병순 옮김(2019), 『불로소득 자본주의』, 여문책)

국제적 맥락이다.

자연을 보전하고, 복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변화, “전환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에 소요되는 재정적 자원을 국가가 동원하고자 한다면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금융부문은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의 주인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시스템 전환이 시급한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해 계속 냉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 노동운동 사이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데, 넓게는 “노동”으로 정의되는 99%의 이해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수립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조운동이 필요하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모건소(Henry Morgenthau)가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수립 당시 주장한 바와 같이, “국익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길은 국제협력, 즉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합된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²¹⁾

우리는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자유주의적 금융체제의 “완전한 유토피아(stark utopia)²²⁾”라고 칭한 세계화에 반대되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화는 탈세 및 유동자본을 관리하는 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기여하고 개별 국가의 국익과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는 금융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스트롱맨(strong man)”을 뽑으면서, “사회의 인간적·자연적 존재”를 모두 절멸시키는 탈규제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다.

팬데믹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듯이, 금융세계화는 전 세계의 인명을 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 및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오히려 팬데믹은 힘 있는 금융 및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고 국제무역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심지어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위협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조차 전 세계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유층으로 정의되는 1%의 부를 늘려

21) 미국 재무장관 겸 브레튼우즈 회의 의장인 헨리 모건소 주니어는 1944년 7월 22일 연설에서 브레튼우즈로 명명된 새로운 국제 금융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케인스/화이트(Keynes/White)의 계획을 환영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20~30년대의 긴축재정, 금융위기 및 경제 실패를 초래한 기존의 금본위제를 대체했다. 당시 연설문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s://www.cvce.eu/content/publication/2003/12/12/b88b1fe7-8fec-4da6-ae22-fa33edd08ab6/publishable_en.pdf

22) Polanyi, K.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 Beacon Press, p.3.

준 것은 바로 금융세계화 시스템이다.

진정한 의미의 그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고 대초원 지대(Dust Bowl)의 모래바람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금융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그는 가장 먼저 1920~30년대의 세계화에 해당하는 금본위제를 해체했다.

■ 2008년의 그린뉴딜

원래 그린뉴딜은 런던의 경제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작성하고 2008년 9월에 공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기후붕괴와 경제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 즉 경제 및 환경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린뉴딜은 금융화 및 세계화된 경제와 생태계에 대한 사회의 접근 방식에 있어 단순한 행동 변화나 지역사회 또는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정부 및 정부 간 차원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또한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화는 경제, 특히 금융부문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금융, 경제 및 생태계가 모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생태계를 보호·복구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일은 다른 부문의 변화 없이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책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 경제가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개편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일은 세계화된 금융부문이 사회와 지구의 이익이라는 대의에 따르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

환경옹호론자들은 개인(예: 전구 바꾸기) 또는 지역사회(예: 재활용, 재사용, 줄이기, 고쳐 쓰기, 로컬화) 차원의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여러 부문에 걸친 전 지구 및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즉 국가의 행동이 수반되는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촉구하는 일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그린뉴딜의 포부는 루스벨트의 1930년대 뉴딜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훨씬 더 원대하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1930년대 뉴딜의 창시자들은 상상할 수 없

을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루스벨트 행정부의 급진적 경험에는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루스벨트는 후버 전(前) 대통령이 정한 금본위제라는 경제적 정설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제1차 세계대전 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초안을 마련한 통화정책을 채택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통화 이론과 정책이 미국의 경제회복을 가능케 할 것으로 강하게 확신하여, 대통령 취임식 저녁에 곧바로 금본위제라는 “환상적인 기계(the fantastic machinery)”, 즉 시장(특히 월스트리트)에 의한 지배가 최선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1930년대의 세계화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상기시킨 바와 같이, 대통령 취임식 다음 월요일을 은행 휴무일로 발표한 것은 긴급조치였지만, 화폐금(monetary gold)을 포함한 통화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연방정부로 이전하고 정부 규제 밖에서 소수 특권층이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첫 단계였다.²³⁾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계속 증가하는 유독가스 배출의 근본 원인, 즉 월스트리트와 기타 금융 중개기관에 기반한 자율규제적이고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루스벨트 행정부가 취했던 조치들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화석연료 생산자뿐만 아니라 투기업자와 소비자에게도 기하급수적인 규모의 융자(부채)를 아무런 규제 없이 퍼부어 주고 있다. 이러한 융자는 다시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채굴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된다. 쉬운 돈이 나오는 수도권까지를 잠가야만 원유와 기타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린뉴딜의 핵심 : 루스벨트, 케인스 및 연합 정책

그린뉴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미국 대통령의 통화정책으로 세계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비교적 최근의 사건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취임식

23) Rauchway, E.(2015), *Money Makers : How Roosevelt and Keynes Ended the Depression, Defeated Fascism, and Secured a Prosperous Peace*, New York : Basic Books, p.54.

이 열렸던 1933년 3월 4일 밤에 전 지구적인 금본위제를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긴축재정과 당시 25%에 달하던 실업을 끝내기 위해 정부를 가동하고, 고용창출과 국내경제 전환뿐만 아니라 모래바람으로 인한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및 정책을 동원했다.

케인스가 그랬던 것처럼 루스벨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재정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여러 시스템 중 하나로서 금융시스템의 역할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고 경제적 거래 및 관계의 조정을 지원해야 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금융시스템은 경제의 하인 역할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인의 역할을 맡은 소수 엘리트가 장악하고 있다.

1933년에 그러했듯이 2021년인 지금도 그러하다.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을 역내화하여 경제와 생태계의 주인이 아닌 하인의 역할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에 대한 답변 대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과 승무원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책임자였던 저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기술이 성공하려면 홍보보다 현실을 우선하여야 한다. 자연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영국과 한국이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인류문명이 생존하려면, 홍보보다 현실을 우선해야 한다. 자연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KLI**

24) 맨체스터대학교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교수의 기후변화 관련 발표 중, 리처드 파인만의 우주왕복선 사고 조사 당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을 재인용함. 자세한 발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s://redd-monitor.org/2019/09/05/nature-cannot-be-fooled-kevin-anderson-on-mitigation-as-if-climate-mattered/>

참고문헌

- Anderson, K.(2019), “Brief Response to the UK Government’s “Net-zero” Proposal”, <https://kevinanderson.info/> (검색일 : 2021.7.18).
- Bradsock, F.(2021), “UK Ramps Up North Sea Oil Production”, *Oilprice.com*, May 29, <https://oilprice.com/> (검색일 : 2021.7.19).
- Ceballos, G., P. R. Ehrlich, and P. H. Raven(2020), “Vertebrates on the Brink as Indicators of Biological Annihilation and the Sixth Mass Extinc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24), p.13596.
- Christophers, B.(2020), *Rentier Capitalism : Who Owns the Economy, and Who Pays for It?*, London : Verso.
- Chung, J.(2019), “South Korea Fires Up on Renewables, to Close More Coal Plants”, *Reuters*, June 18,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 2021.7.19).
- Goldin, I. and M. Mariathasan(2014), *The Butterfly Defect : How Globalisation Creates Systemic Risks,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and Oxford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45.
- Herrbin, R.(2020), “Heathrow Wins Court Battle to Build Third Runway”, *BBC*, December 16,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1.7.19).
- HM Government(2020),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gov.uk/> (검색일 : 2021.7.19).
- IEA(2019),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eb3b2e8d-28e0-47fd-a8ba-160f7ed42bc3/CO2_Emissions_from_Fuel_Combustion_2019_Highlights.pdf (검색일 : 2021.7.17).
- ILO(2020), “COVID-19 Drives Wages Down, New ILO Report Finds”, <https://www.ilo.org/> (검색일 : 2021.7.17).
- Lee J. H. and J. Woo(2020), “Green New Deal Policy of South Korea : Policy Innovation for a Sustainability Transition”, *Sustainability*, 12(23), p.2.
- Mazzucato, M.(2018), *The Entrepreneurial State*, Penguin, p.5.
- Pettifor, A.(2021), “Quantitative Easing : How the World Got Hooked on Magicked-up Money”, *Prospect Magazine*, July 16, <https://www.prospectmagazine.co.uk> (검색일 : 2021.7.17).

-
- Polanyi, K.(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 Beacon Press, p.3.
 - Rauchway, E.(2015), *Money Makers : How Roosevelt and Keynes Ended the Depression, Defeated Fascism, and Secured a Prosperous Peace*, New York : Basic Books, p.54.
 - Standing, G.(2017),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London : Biteback Publishing, p.213. (한국어판 : 김병순 옮김(2019), 『불로소득 자본주의』, 여문책)
 - Tiseo, I.(2021), “Cumulative Carbon Dioxide Emissions Produced in the United Kingdom in Selected Years from 1750 to 2019(in Million Metric Tons)”, <https://www.statista.com/> (검색일 : 2021.7.18).
 - Tooze, A.(2018), “Beyond the Crash”, *The Guardian*, July 29,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4.15).